

한국 교육산업 대책부⑤

구조조정의 기로에 선 사립대학

2009.9.10 | 김일영_새사연 정치사회연구센터장 | kiy@saesayon.org

목 차

1. 미래의 기대수익이 의심스러운 사립전문대학의 졸업장
2. 사립대학 양극화의 끝자락, 비수도권사립대학
3. 등록금에 의존한 자원조달은 한계에 봉착
4. 쌓아놓은 적립금은 혁신의 발판이 될 수 있나
5. 상위 5%가 아닌 두터운 중하위 사립대학을 활용하자



<http://saesayon.org>

1. 미래의 기대수익이 의심스러운 사립전문대학의 졸업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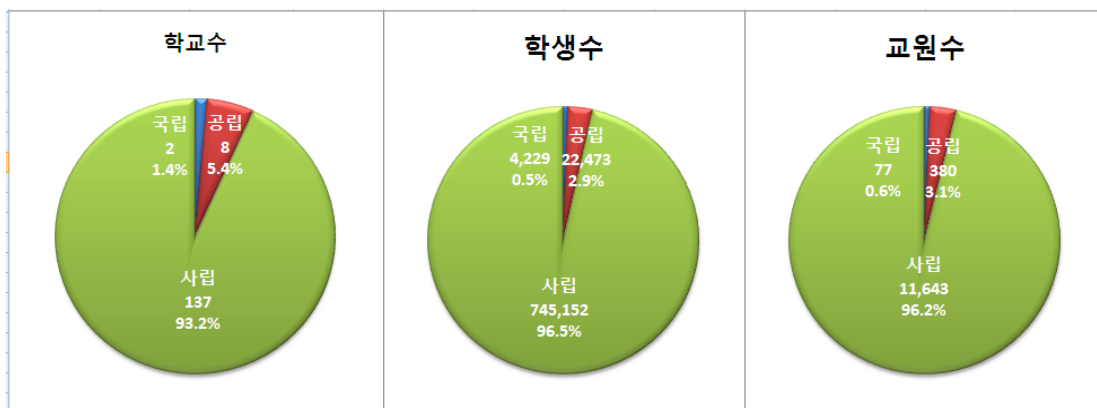
고등교육이 보편화됨에 따라 학령인구의 약 80퍼센트가 대학에 진학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대학교육은 신분이동의 유력한 수단으로 인식되어 예전부터 우골탑으로 불리었고, 지금도 ‘등록금 1000만원 시대’라는 말처럼 수익자부담이 당연시 되어왔다. 고등교육은 교육의 정점이라 할 수 있고, 사회로 나아가는 마지막 관문이다. 어느 대학을 나왔는가가 취업이나 사회적 지위 형성에 결정적 요인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다. 소위 명문대학의 입학전형의 변화는 초중등교육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엄청나게 커져 있는 사교육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막강한 힘을 발휘한다.

한국의 고등교육이 국가적 위상에 걸맞지 않게 뒤떨어져 있고 산업수요에도 조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은 많지만, 대학 스스로의 노력이나 정부의 정책개입도 만족할 만한 결과를 보여주지는 못했다. 오히려 대학의 자율성이 국가의 개입으로 제한받고 있기 때문에 혁신이 어렵다는 논리가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제출되고 있을 뿐이다. 고등교육에서 절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점하고 있는 사립대학들이 과연 그러한 주장을 할 수 있는 상태인지 그 실태를 살펴보자.

고등교육기관은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전문대학은 기술인력 공급이라는 취지에 따라 육성되었고, 학력 상향화 현상에 따라 1990년 이후에도 꾸준히 늘어났다. 현재 147개의 전문대학이 있으며 사립전문대는 그 중 93.2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학생수나 교원수는 그보다는 3퍼센트 정도 더 많은 비중을 점하고 있다.

그림 1. 전문대학 설립별 기본지표
(2008, 교육통계연감, 단위 : 개, 명)



늘어난 전문대학은 일반대학보다 높은 취업률에도 불구하고 학생들로부터 점점 더 외면 받고 있다. 전체 전문대학의 학생충원률¹⁾은 대학에 비해 3.6퍼센트 낮은

1) 학교정원에 비하여 얼마나 입학생을 유치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

92.1%에 머물고 있다. 특히 사립전문대학의 평균 학생충원률은 그보다 더 낮은 91.7퍼센트이다. 심각한 것은 비수도권(86.9퍼센트)에 소재한 사립전문대학인데, 수도권(99.7퍼센트) 소재 사립전문대학보다 12.8%나 낮다. 비수도권의 전문대학이 학생 유치에서 겪는 어려움의 정도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고 수도권 전문대학이 상태가 좋은 것만은 아니다. 비수도권에 비해 학생충원률이 상대적으로 좋은 수도권 전문대학들도 휴학생 비율에 있어서는 상황이 좋지 않다. 2008년 현재 36.7퍼센트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오히려 비수도권전문대학이 상대적으로 나은 편인데, 2003년 40.9퍼센트로 고점을 찍은 후 33.4퍼센트까지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이것도 일반대학의 휴학생 비율이 30퍼센트 초반에서 증감을 반복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는 나쁜 편이다.

학생유치가 어려움에도 사립전문대학의 입학금과 수업료²⁾는 비싸다. 국공립전문대학에 비해 월등히 높아서 입학금 최고액³⁾은 95만원으로 국공립 입학금 최고액인 43만6000원의 2배 이상이다. 수업료 최고치도 860만 2000원으로 국공립의 452만 2000원보다 1.9배나 많다. 이렇게 높은 비용은 결과적으로 사립전문대학이 고등교육기관 중에서 가장 높은 등록금 의존율로 나타난다. 2006년까지만 해도 사립대학의 등록금 의존율인 41.2퍼센트보다는 낮은 35.6퍼센트였는데, 2008년에는 37.3퍼센트로 사립대학의 34.3%를 추월했다. 계속 등록금 의존율이 증가하고 있다. 국공립 전문대의 비중이 작기 때문에 사립전문대학의 이러한 추세는 전체 전문대학의 실태라도 봐도 무방하다.

전문대학들은 취업률이 높다는 것을 강점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그 강점이 얼마나 영향력을 발휘할지 의문이다. 취업률이 높은 대신에 전문대 졸업 후 받는 임금이 일반대학 졸업 후 받는 임금보다 상당히 낮기 때문이다. 대졸이상의 학력의 경우 월 280만 7000원을 받는 반면, 전문대졸의 경우 184만 3000원에 불과해서 1년 단위로 환산할 경우 1156만 8000원의 격차가 발생한다.

이를 비용 대비 산출이라는 관점에 계산해 보면 전문대학의 매력은 급격히 떨어진 다. 사립대학 공학계열의 수업료 최고액인 969만 6000원과 전문대의 수업료 최고액은 약 100만 원의 격차가 난다. 전문대학이 2년제이기 때문에 2년간의 수업료 격차와 추가 2년 동안의 일반대학 등록금을 합산하여 전문대학 진학에 따른 절약비용을 계산하면 2158만 원이다. 이 금액은 전문대 졸업자와 대학 졸업자의 임금의 1년간의 격차 1156만 8000원의 1.87배 수준이다. 전문대 졸업 후 먼저 취업한 사람이 8년 직장생활을 하면 1억 7698만 원, 대학 졸업한 사람이 2년 늦게 취업하여

2) 사립은 수업료의 항목만 있으므로 국공립과의 비교할 때는, 국공립의 수업료와 기성회비를 합산한 금액과 비교한다. 이는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공히 적용된다.

3) 최근 대학의 등록금은 계속 인상되고 있고 최고액을 따라 지속적으로 인상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므로 평균액이 아니라 최고액을 기준으로 살펴보았다.

6년 직장생활을 하면 2억 210만 원의 소득을 올린다. 그 때의 격차가 2518만 원인데, 대학졸업자의 입장에서는 투입비용의 차이를 상쇄하고도 남는 액수다. 게다가 초봉의 차이가 임금 인상 폭의 차이로 반영되어 양자 간의 격차는 더욱 증폭된다.

취업 후 다시 대학교육을 받는다고 해도 기존 직장에서 임금이 바로 인상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 연령 등의 다른 조건들과 결부되면 이직이 쉬운 것도 아니다. 결국 전문대학으로의 진학이 갖는 매력은 점점 더 떨어지고,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되는 경우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

평균 수업료를 비교한 것은 아니지만 사립대학과 비용 차이에 비해 취업 후 기대이익이 높지 않고 장기적으로 그 격차가 더 벌어져 만회하기 쉽지 않다는 사실은 전문대학교육이 심각한 존립위기에 처해 있음을 시사한다. 학령인구의 감소에 따라 일반대학들조차 학생충원률이 떨어지면 학생유치를 위한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고, 고등교육의 최하층에 위치 지워진 사립전문대학들이 그 직격탄을 맞을 것이다. 국공립전문대학은 상대적으로 나은 편이지만, 졸업 후 비용 대비 기대 수익이 작은 사립전문대학들 중 상당수가 폐교의 위기에 처할 수 있다.

학력인플레이션 현상과 대학 진학을 위한 경유지라는 측면 때문에 높은 등록금에도 불구하고 전문대학 교육의 수요가 유지되고 있지만 이러한 상황이 얼마나 지속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폴리텍 대학과 같이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새로운 교육기관이 기술인력 육성을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대학 교육의 활로를 찾는 것은 사립전문대학의 존립에 절실한 과제다.

2. 사립대학 양극화의 끝자락, 비수도권 사립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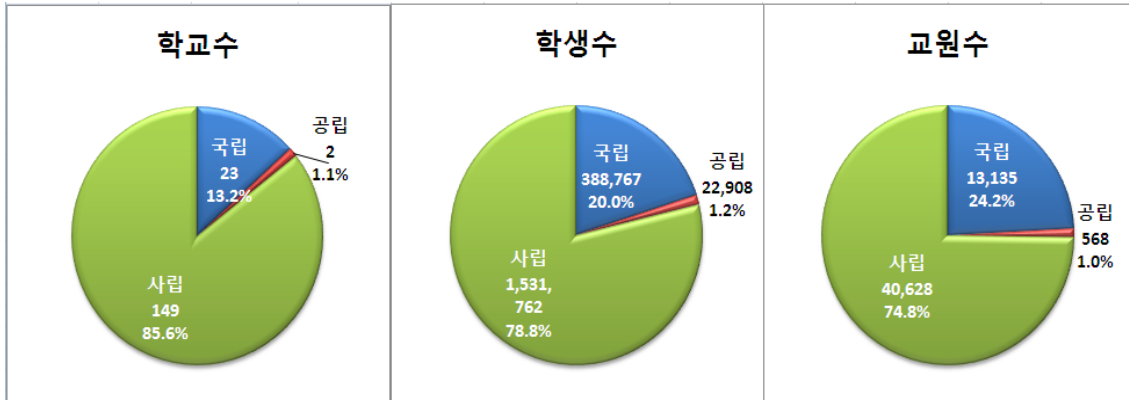
고등교육에서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일반대학이다. 산업대학과 같은 특수한 형태를 제외한 일반대학에서 비영리민간교육기관인 사립대학을 살펴보자.

일반대학은 전문대학보다 상대적으로 국공립의 분담률이 높지만 사립의 비중이 80퍼센트 정도로 압도적인 것은 마찬가지다. 국립대가 저렴한 교육비, 안정된 고용 등으로 우수학생과 우수교원을 유치할 수 있는 점 등에서 유리한 점이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립대가 학교수는 적은데도 학생수나 교원수가 많은 것은 대체로 종합대학의 형태여서 규모가 크기 때문이다. 그래도 교원 1인당 학생수만 놓고 볼 때 국립대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등 발전은 교육에서도 예외가 아닌데, 고등교육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그래서 사립대학을 살펴볼 때도 수도권과 비수도를 나누어 비교할 필요가 있다. 사립대학의 문제는 학생 1인당 공교육비의 규모와 사부담공교육

비에서 두드러지게 드러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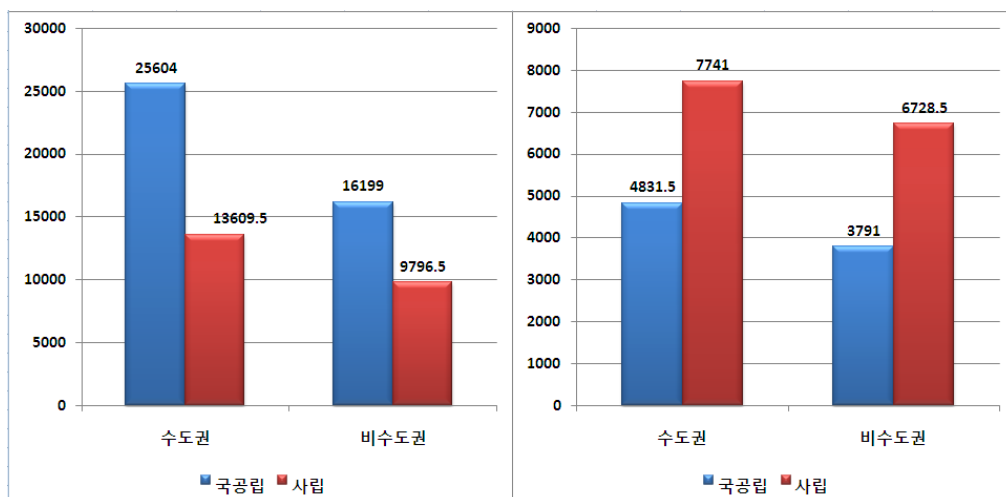
그림 2. 대학 설립별 기본지표
(2008, 교육통계연감, 단위 : 개, 명)



먼저, 학생 1인당 공교육비를 보면, 수도권 사립대학은 1360만 9500원으로 수도권 국공립대학의 2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 비수도권 사립대학도 979만 6500원으로 비수도권 국공립대학의 60퍼센트 수준으로, 수도권보다는 격차가 덜하지만 상당한 차이를 보이기는 마찬가지다.

두 번째로 사립대학이 국공립대학에 비해 교육여건이 더 나쁘다고 할 수 있는 이유는 공교육비 중 사부담 비용의 비중을 보면 극명히 드러난다. 수도권의 사립대학의 사부담은 774만 원으로 국공립의 483만 원보다 291만 원이나 많고, 비수도권의 경우 672만원으로 국공립의 379만 원보다 293만 원이나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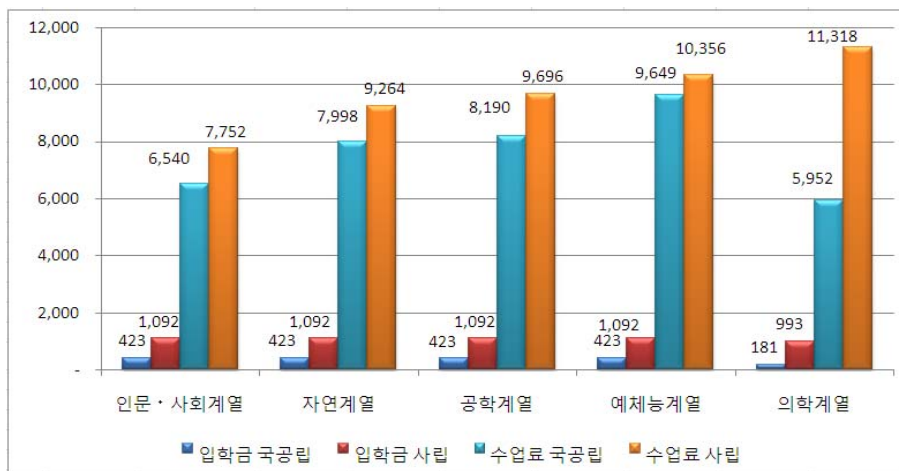
그림 3. 대학 학생1인당 공교육비(좌) 및 사부담공교육비(우)
(2008, 이정미 외, 한국교육개발원, 단위 : 천원)



사립대학은 교육비용의 절대규모와 사부담의 비중 두 가지 측면 모두에서 열악한 상태이며, 이는 고스란히 학생들의 고통이 되고 있다.

취업 후 소득이 높은 계열일수록 수업료가 비싼 것은 당연하다고도 볼 수 있으나, 기대수익의 격차를 반영하지 못하고 전반적으로 상향평준화되어 있다. 외부효과가 큰 교육의 특성 상 개인의 기대이익은 낮더라도 사회적 이익이 큰 분야에는 정부의 지원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 현실은 이러한 점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 이익은 크나 개인의 기대이익이 낮은 계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국공립대학의 등록금 책정에서부터 반영하여 전체로 확산시킬 필요가 있는데, 단적으로 국립대의 의학과열⁴⁾은 개인의 기대이익이 높은 것에 비해 사부담교육비마저 작아서 부익부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4. 대학 설립별 입학금 및 수업료 최고액 비교
(2008, 교육통계연감, 단위 : 천원)



사실 국립대학이 기성회비를 늘리면서 사립대학과의 사부담 교육비의 격차를 줄이고 있고, 이것이 전체 대학등록금 인상의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그래서 국공립대와 사립대학의 차이도 중요한 문제지만 그 격차는 고등교육 재정이 늘어나고 등록금 제도의 개혁으로 어느 정도 해결될 수도 있다.

더 큰 문제는 사립대학 내부의 양극화다. 수도권의 사립대학과 비수도권의 사립대학은 서열에 따라 등록금 격차도 많이 나고, 학생충원율도 점차 벌어지고 있다. 한마디로 비수도권의 사립대학은 학생수 감소와 낮은 수업료 수입으로 재정위기가 당장 눈앞의 불똥이라는 것이다. 정부도 사립대학의 합병, 통합 등 구조조정을 적극 권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 신설을 준비하는 학교법인들 중 개교를 하지 못하고 있는 법인이 24개나 되고, 12개 학교는 아예 개교하지 못한 채 강제 해산 당하기도 했다.

한편, 대학원생의 70.2퍼센트를 분담하고 있는 사립대학원은 사립대학 재단이 설립한 경우가 일반적이라 대학의 상황과 유사하다.

4) 국립대 의학과열은, 부속 대학병원이 수익금의 상당액을 관련 학부로 지원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림 5 사립전문대학(좌), 사립일반대학(우) 입학금과 수업료 격차 비교
(2008, 교육통계연감, 단위 :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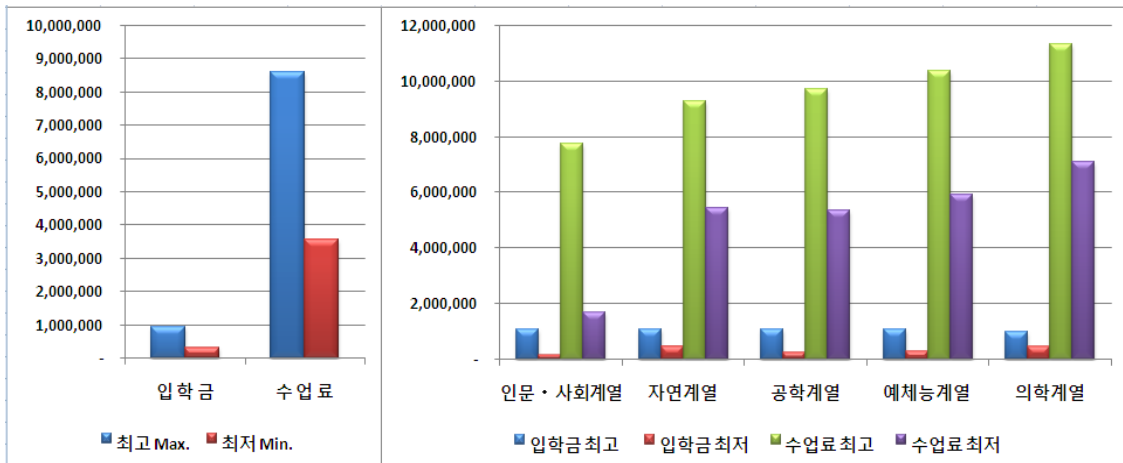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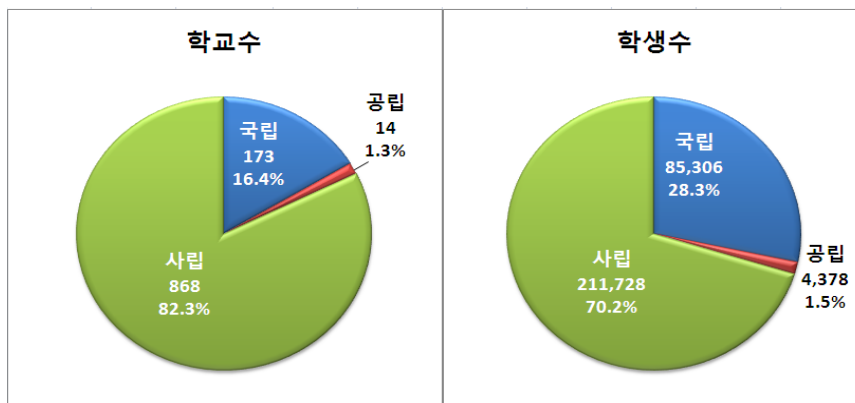


그림 6. 대학원 설립별 기본지표
(2008, 교육통계연감, 단위 : 개, 명)



3. 등록금에 의존한 재원조달은 한계에 봉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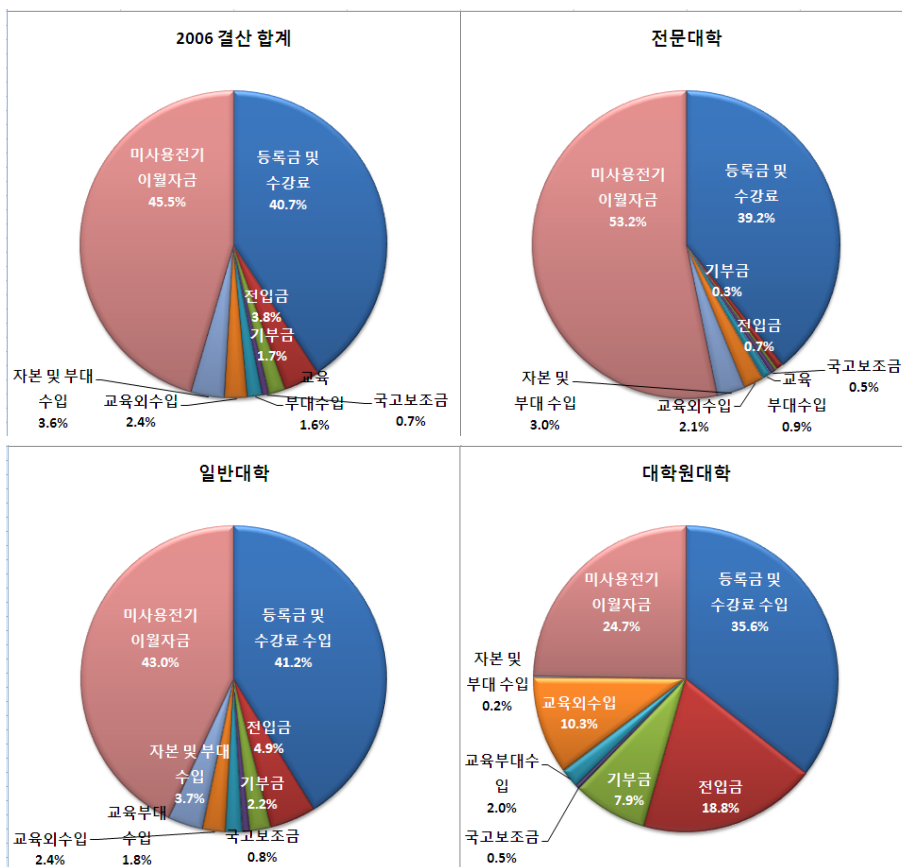
고등교육의 비영리민간교육기관인 사립전문대, 사립대학, 사립대학원은 고등교육의 약 80퍼센트를 분담하고 있으며, 그 재원은 사부담과 정부지원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 학령인구의 감소라는 피할 수 없는 미래적 위기 요인과 산업적 수요와의 미스매치, 국제비교에서 대학경쟁력의 정체라는 현재적 문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 과연 위기를 타넘고 개별 기관의 입장에서나 국가의 입장에서나 바람직한 혁신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인가? 교육통계서비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2006년 결산회계와 2008년 예산회계를 기초로 사립 고등교육기관의 세입세출구조⁵⁾를 간단히 살펴보았다.

가장 큰 특징은 등록금 및 수강료가 40.7퍼센트를 차지하고, 그보다 더 많은 비중

5) 산학협력단 회계를 제외한 수치임.

인 45.5퍼센트가 미사용 전기이월자금이라는 것이다. 미사용 전기이월자금의 재원도 사실상 등록금 및 수강료의 누적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70퍼센트 이상이 사부담에 의존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2005년도 OECD 국가의 고등교육 사부담 평균이 26.9퍼센트이고 한국은 75.7퍼센트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와 비슷하게 맞아 떨어진다. 또 사학진흥재단의 2007년 결산 자료에서도 등록금 수입이 65.7퍼센트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렇게 사부담이 많다는 것은 국가의 고등교육 재정 투자가 빈약하다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고등교육비에서 공부담이 GDP 대비 0.6퍼센트로 OECD 평균인 1.1퍼센트의 절반을 간신히 넘고 있다.

그림 7. 사립 고등교육기관의 2006년 결산 세입구조
(2008, 교육통계연감, 합계는 산업대 등 각종학교 포함,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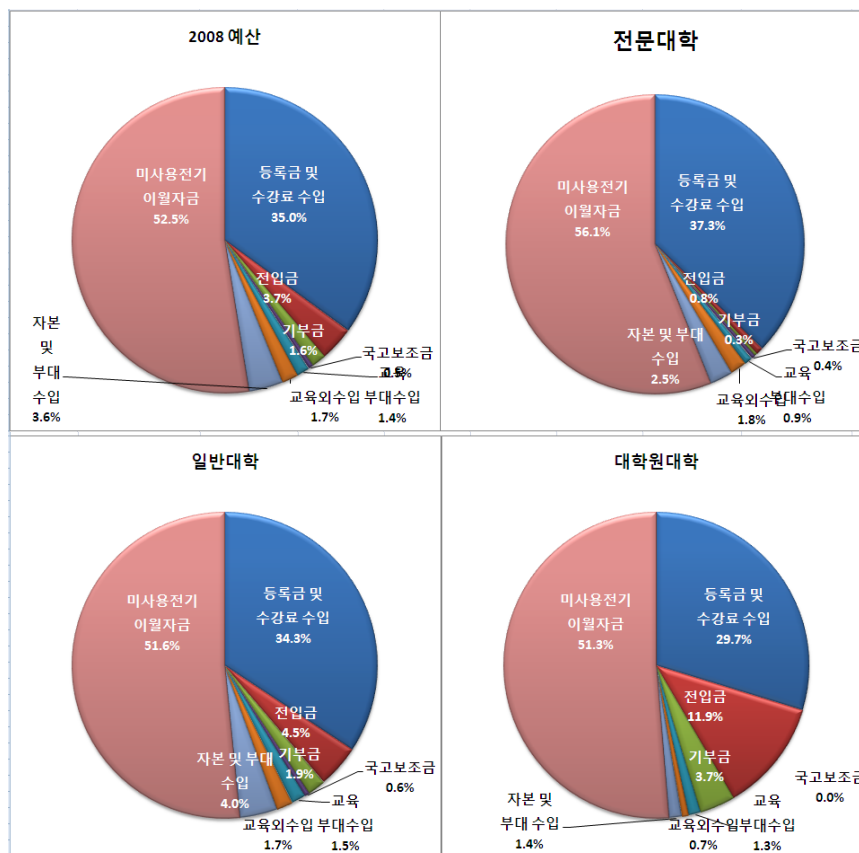
문제는 사부담에 지나치게 의존적인 고등교육이 가계에 부담이었는데, 최근의 경제위기는 가계의 지불능력이 임계점에 다다랐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등록금 인상도 쓰기 힘든 방안이 되었다. 게다가 대학 졸업 후에도 취업이 쉽지 않은 현실에서 사회여론을 감안하면 대학도 막무가내로 올릴 수 없는 형편이다.

학생들은 비용대비 효과가 더 높은 것으로 인식되는 해외유학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고, 아니면 아예 교육을 포기하는 경향도 늘고 있다. 학령인구의 감소와 이러한 상황이 맞물리면 대학들은 학생 충원에 더 곤란을 겪을 것이고, 그 피해는

우선 비수도권의 사립대학들이 입게 될 것이다.

대안으로 자구적 노력을 요구하는 것도 있지만 딱히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사립대학 당국의 무책임만을 얘기하기에는 수도권 몇몇 사립대학을 제외한 전반적인 사립대학의 재원 확보 능력이 너무 취약하다. 2006년, 2008년 결산 및 예산 통계에 따르면, 세입에서 전입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3.8퍼센트에서 3.7퍼센트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국고보조금⁶⁾의 비중도 줄어들고 있다. 금액이 변하지 않았어도, 등록금 인상 속도를 전입금과 국고보조금이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그림 8. 사립 고등교육기관의 2008년 예산 세입구조
(2008, 교육통계연감, 합계는 산업대 등 각종학교 포함, 단위 : %)



현실이 그러한 데에는 자구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데 그 1차적 책임이 있다. 그렇다 해도 기부문화가 미성숙한 사회여건과 토지 등 현금 수익성이 높지 않은 사립대학의 자산 구성을 볼 때 한계가 뻔히 보인다. 그렇다고 미국의 대학들처럼 헤지펀드 투자와 같은 위험한 자금운용을 권할 수도 없다. 몇몇 대학은 경제위기로 인해 투자한 펀드의 가격하락으로 장부상 큰 손실을 보기도 했다. 혁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기에는 정부의 인센티브가 너무 작고, 스스로의 재원만 가지고는 대대적인 혁신사업을 벌일 엄두가 나지 않는 형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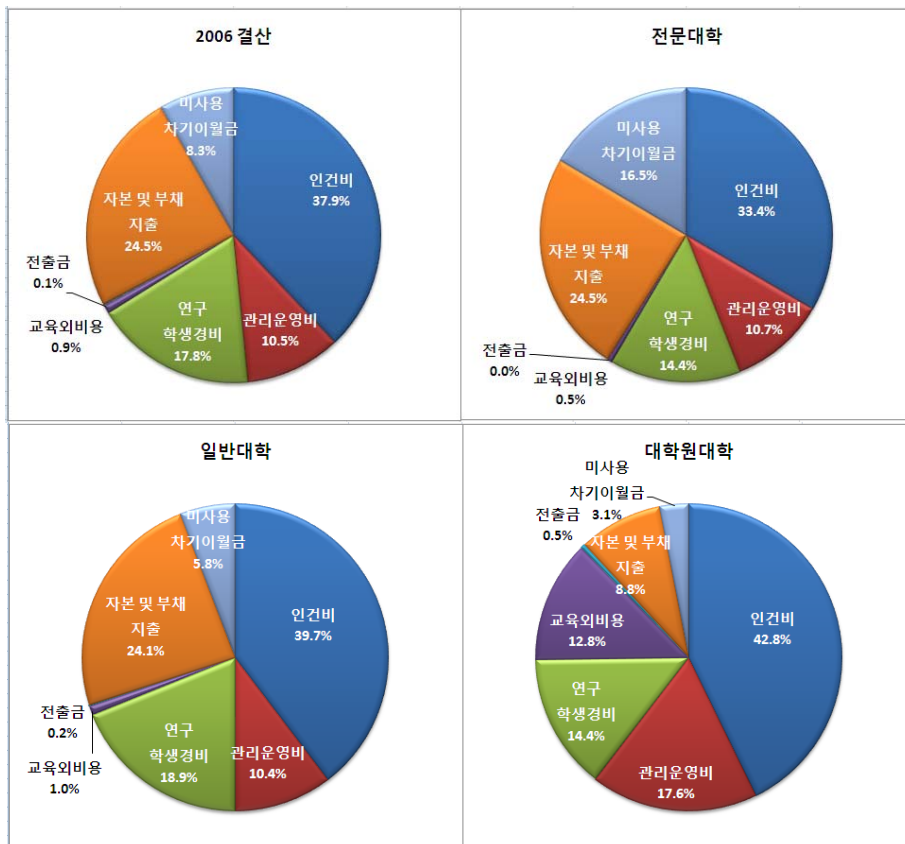
6) 연구비로 별도의 회계로 다루어지는 산학협력단 회계를 제외했기 때문에 이처럼 수치가 낮다.

정부가 고등교육 예산을 늘리는 것이 가장 분명한 대안이지만 국민의 세금을 쓰는 만큼 분명히 효과를 볼 수 있는 계획이 제시되어야 한다. 또 당장은 재원 확보를 위한 사회적, 정치적 결정 과정도 쉽지 않다. 그럼에도 사립대학들의 모습은 여전히 안일하다. 2008년 세입예산에서 보는 바와 같이 등록금 인상에 대한 사회적 저항이 심해짐에 따라 등록금 수입의 비중도 주춤하기는 했지만 다른 근본적 대책이 강구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누적 등록금이라 할 수 있는 미사용전기이월금의 규모를 늘려가며 현상유지를 하면서 언제든 등록금 인상을 시도할 기회만을 엿보고 있다.

4. 쌓아놓은 적립금은 혁신의 발판이 될 수 있나

우리나라 사립대학들이 그동안 쌓아놓은 자금은 2008년 현재 5조 4000억 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민단체들과 학생들은 이렇게 쌓아두는 적립금만 줄여도 등록금 인상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대학의 발전을 위한 재원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뾰족한 수가 없다. 결국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 확대가 만병통치약처럼 거론될 수밖에 없다. 사립대학들로서도 정부의 확실한 재정지원책이 마련되지 않는 이상 적립금 쌓기를 중단하지 않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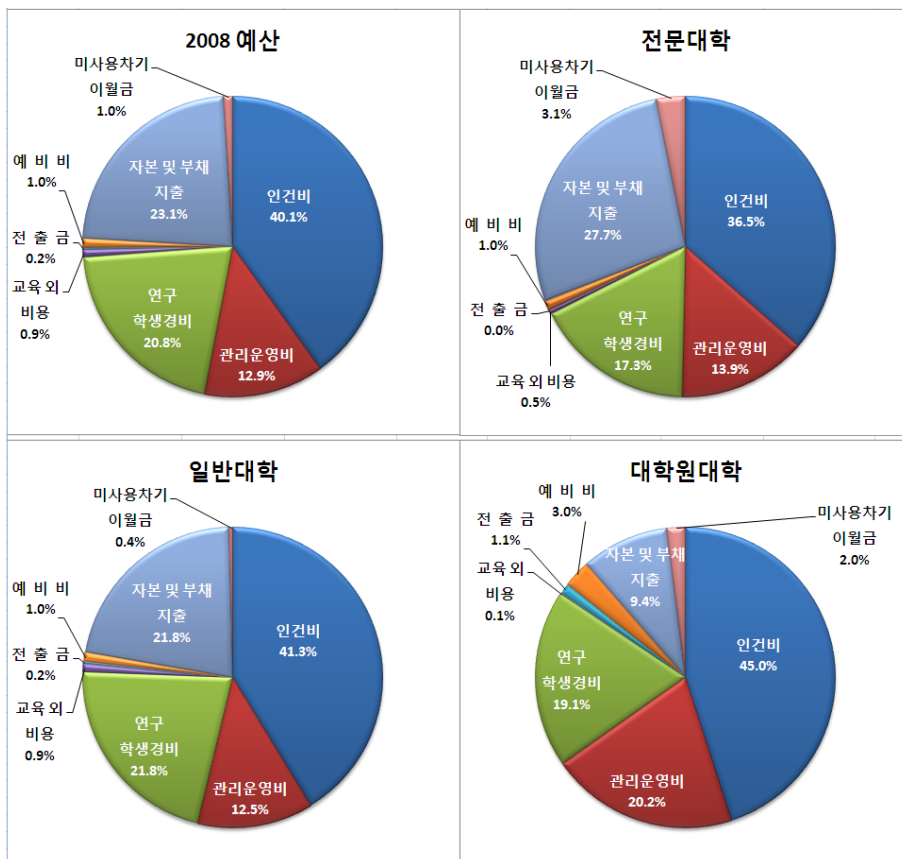
그림 9. 사립고등교육기관의 2006년 결산 세출구조
(2008, 교육통계연감, 합계는 산업대 등 각종학교 포함, 단위 : %)



사립대학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1퍼센트 수준으로 미사용차기이월금을 짜지만, 결산을 할 때가 되면 그 비율이 10퍼센트 수준으로 상승한다. 그 중의 일부를 적립금으로 축적해 왔다. 그렇다고 무조건 적립금만 늘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 부채를 상환하기 위한 지출도 많지만 건물 신축과 같은 자본투자도 상당한 수준으로 하고 있다. 너도나도 교육여건이 좋은 학교를 선택하는 마당에 우수한 교수진 영입과 좋은 시설 구비는 생존에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5조 원이 넘는다는 누적적립금이 장기적인 대학발전의 재원으로서 적정 규모와 지속성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우선 그 규모가 2008년 사립대학 예산의 절반에 불과한 규모로서 지속적으로 충당되지 않는다면 금세 고갈될 것이기 때문이다. 언제까지나 등록금을 올릴 수도 없다. 가계의 지불능력도 능력이지만 외국유학이 더 저렴한 상태에 도달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림 10. 사립고등교육기관의 2008년 예산 세출구조
(2008, 교육통계연감, 합계는 산업대 등 각종학교 포함, 단위 : %)



두 번째는 사립대학 적립금의 대부분은 서울 소재의 몇몇 학교에 집중된 것이므로 사립대학의 전반에 적용할 수도 없다. 적립금이 많은 대학들은 등록금 뿐 아니라 서열화된 대학구조에서 기부금도 많고 자산도 건전한 편이다. 문제는 다른 사립대학들, 특히 비수도권사립대학들이다.

5. 상위 5%가 아닌 두터운 중하위 사립대학부터 개혁해야

간략하게나마 보육에서부터 고등교육까지 비영리민간교육기관에 대한 기초적인 실태를 확인해 보았다. 그 결과 고등교육의 상태가 가장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첫째, 평생교육의 한 과정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위안을 삼을 수도 있지만, 일반대학으로 가기 위한 경유지의 성격이 강해지면서 전문대학의 정체성에 근본적 의문이 든다. 학생을 유치하기 급급한 상황을 코앞에 두고 그러한 경유지의 역할조차도 비수도권 사립대학에게 빼앗길 경우 활로가 없다.

둘째, 비수도권 사립대학들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아 사립전문대학 다음의 구조조정 대상이 될 것이다. 활로를 개척하지 못하면 전문대학과 마찬가지로 전체 규모를 축소하는 길 밖에 없다.

셋째, 문제는 규모의 축소나 교육내용의 질적 향상을 추구해 나갈만한 현실적 동기, 당사자들의 혁신 욕구, 혁신에 필요한 재정적 기반 등 전반적인 사립대학의 혁신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내외적 여건이 불비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교육산업의 개편 또는 한국의 교육대안의 모색에서 비영리민간교육기관과 관련하여 몇 가지 생각을 정리할 수 있다.

먼저, 초중등교육에서 국공립학교의 교육주체들에게 보다 많은 자율성을 줌으로써 공공성을 담보하면서도 창의적 교육이 자리 잡도록 하는 정책을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지금도 초중등교육에서 학교단위 재량권을 확대하기 정책이 추진되고는 있다. 하지만 자율형사립고나 국제중학교와 같은 정책이 교육현실에 더 직접적이고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앞으로 상당한 비중을 점하고 있는 사립고등학교를 학생이 선택할 수 있게 된다면 사립학교는 대부분 자율형사립고를 지향할 것이다. 그러면 <소수의 부자사립고등학교와 특수목적고>, <중산층을 위한 사립고등학교>, <서민과 빈곤층을 위한 국공립고등학교>로 고등학교까지 서열화가 고착될 것이다.

기본적으로 높은 수업료를 기반으로 하는 자사고의 성공이 국공립학교가 따라갈 수 있는 모델로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라도 학교단위 재량권, 교사의 재량권을 국공립학교에서부터 확대하여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정책이 고안되어야 한다. 더불어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확대해야 한다.

둘째, 사립대학에 대부분 일임되어 있는 고등교육이야말로 교육 개혁과 사회 전반의 혁신의 핵심고리란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비록 비영리기관이 다수를 점하고 있지만 사회적 기능을 볼 때 사립대학의 관계자들에 맡겨놓기에 너무나 중요한 국가차원의 의미가 있다. 대학이 초중등교육과 사회경제에 미치는 연관효과를 잘

타산하여 전반 혁신의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지 입시제도의 변경으로 사교육을 잡겠다는 식의 교육개혁은 늘 제자리를 맴돌기만 할 것이다.

셋째, 국가의 고등교육 재원 확대를 기반으로 국공립대학을 축으로 비수도권사립대학과 상생하는 방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 수도권의 주요 사립대학들을 통제할 힘도 의지도 없는 정부가 그들을 중심으로 교육개혁을 추진하려는 것은 소모적일 뿐이다. 그들은 스스로의 혁신을 통해 살아남도록 하는 편이 낫다. 오히려 비수도권 사립대학들을 국가의 인적자원 육성의 동반자로 만들어야 한다. 중장기적 여유를 가지고 통합, 협력, 감축 등 다양한 국공립과 사립대학의 협력을 유도해야 한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국립대 법인화나 사립대학이 요구하는 재정지원 확대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고등교육 발전 대안 속에서 그 타당성이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정부가 추진해온 부실사립대학의 구조조정이 지지부진한 이유로 사학 관계자들은 현행법상 폐교 이후 자산 처분의 재량권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설립자나 사학재단이 소극적이라고 한다. 공익적 자산이기 때문에 개인에게 이전하겠다는 주장은 하고 있지 않지만 ‘비(非)교육분야의 비영리법인’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구조조정에도 사학재단의 이러한 요구가 있으며, 구조조정에서 빼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 학생들의 교육권과 교직원들의 노동권의 보장이다. 사실 성급한 추진 방식도 문제지만 고등교육 혁신의 큰 그림을 제대로 그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해관계자의 저항만을 가중시키고 있다.

전부(全部)가 아니면 전무(全無)의 방식은 정책수립에 편리할 수는 있어도 현실적이거나 건강한 대안은 아니다. 선두대학은 키우고 후진대학은 잘라내는 단세포적인 구조조정은 신자유주의적 경쟁논리가 그대로 적용된 것으로 국민 다수가 고등교육을 받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교육에 종사하고 있는 현실에서 적합지 않다. 중간에 있는 다수 대학을 끌어올림으로써 선두대학들을 압박하고, 후진대학들은 흡수해 나가면서 점진적으로 효율성을 높여 나갈 수 있다. 천재 1퍼센트가 온 국민을 먹여 살리는 모델이 아니라, 성실한 다수가 온 국민이 먹여 살리는 자긍심 있는 모델을 찾아야 한다.

참고문헌

- 사립대학 구조조정 필요성 및 바람직한 정책 방향, 2009, 박정수, 고등교육선진화를 위한 사립대학 구조조정 토론회
- 사립대학 재무비율 분석, 2008, 한국사학진흥재단
- 대학의 교육비와 수익률 분석연구, 2008, 이정미 외, 한국교육개발원
- 한국교육통계연감, 2008
- 교육통계서비스, 중앙보육센터 통계서비스, 사립대학회계정보시스템, OECD 교육정보센터, 학교알리미, 대학알리미 등 통계사이트